

김인식 본회 총무차장



원유5% 증산운동 적극 전개



1. 머리말

한해를 되돌아 회고하는 시점은 늘 아쉬움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우리 낙농산업만큼 일년내내 분주하면서도 허탈감에 사로잡히는 것은 다른 산업에 비해 더욱 그러하다고 본다.

연초부터 우리 낙농가들은 원유가 현실화와 집유선 동결조치해제요구, 낙농진흥법개정의 추진, 정부의 분유수입추진에 앞선 원유증산운동전개, 사료의 부가세 영세율적용을 통한 생산비인하대책마련 등 당면과제 해결에 소리를 모아 강력히 추진하여 실현해 나갈 것을 건의하였었다. 또 수입개방화 추세에 대응한 장기적 낙농의 활로모색을 위해 전업화 노력에 병행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을 기대하면서 일년을 넘겨왔으나 기대충족보다는 오히려 분뇨처리 시설의 강화조치 등으로 부담만을 고민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졌다고 본다.

부분적인 성취와 미실현 과제의 돌출, 우유과잉에서 젓소도태시책이 엇그체처럼 요란했다가 분유수입을 해와 수요충족에 급급한 수급불균형의 심화현상, 수천년 지켜온 우리 농업의 보루인 쌀마저 개방농쟁에 휩싸인 수입개방의 현실도래 등이 올해의 주요과제이자 지금까지 이월된 문제라 할 것이다.

연초부터 우리 낙동기들은 원유가 현실화와
 집유선 동결조치 해제 요구, 낙농진흥법 개정추진,
 정부의 분유수입 추진에 앞선 원유증산운동 전개, 사료의 부
 가세 영세율적용을 통한 생산비 인하 대책 마련 등 당면 과제
 해결에 소리를 모아 이를 강력히 추진하여 실현해 나갈 것을 결의하였
 었다. 또 수입 개방화 추세에 대응한 장기적 낙농의 활로 모색을 위해 전업화 노력에
 병행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을 기대하면서 일년을 넘겨왔으나 기대
 충족보다는 오히려 분노처리 시설의 강화조치 등으로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기울어졌다

주요 문제에 대해 추진된 경위와 낙농동향을 설명
 하므로써 앞으로의 참고 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2. 집유설의 동결조치

지난해는 남는 우유문제로 심각성을 제기시켰으
 나 올해는 우유부족으로 요란스러운 해가 되어 참
 으로 답답한 느낌이다. 많이 생산되어 문제가 되었
 다면 균형집근은 있어야 하되 오히려 부족해서 역
 전되는 상황까지 초래되었다면 이유가 어떠한 것
 과적으로 정책의 부재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을 것
 이다.

불과 수개월전까지만해도 우유과잉이다하며 일부
 사유업체에 납유하는 농가는 정상적인 생산활동에
 전념키 어려웠다. 유대의 현금대신 분유, 요구르트
 등의 현금지급 혹은 지급기일 지연, 어음결제, 심하
 게는 전년대비 수유량의 책정, 나아가 집유제한조치
 마저 서슴없이 시도되었다. 또 그러한 과정에서 이
 미 냉각 보조비는 아예 요구조차 할 수 없는 분위
 기로 가 있었던게 사실이다.

그렇게도 심각했던 주장들이 지난해 하순에 이르
 러 우유부족조짐이 가시화되면서 유업체가 앞다투
 어 이제는 우유부족을 강조하기 시작하였고, 집유쟁
 탈전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따라서 냉각보조비의
 지급재개는 물론 종전보다 상향조정된 금액제시, 유
 대선도금지급, 조사료 구입비 지급등의 선심공세가 있

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낙우회 혹은 조합운영비 보
 조등 단체공동경비 지급을 통한 집단적인 추가유인
 책이 전국적으로 퍼져 나오게 되었다. 이에 낙농가의
 집유선이동이 나타나게 되었고 급기야 농림수산부는
 1월14일 집유선동결조치와 1월16일 유업체의 대책회
 의, 그리고 2월1일 보완조치를 공문으로 재통보하는
 등 정부차원의 일련의 지시성대책이 나오게 되었다.
 그 골자는 유업체의 경쟁적 선심공세와 낙농가의
 집유선 이탈이 집유질서를 문란시키고 있어 이를
 근절함은 물론 유제품가격인상 요인을 해소코자 집
 유선을 동결조치한것이라고 농림수산부는 밝히고
 있다.

정부의 1.14조치를 기화로 그동안 각종 선심공세
 로 낙농가를 유혹하던 유업체의 손짓이 멈춰졌고
 낙농가와와의 계약등 명문화된 보조금 지급 약속을
 하였던 일부유업체들도 농가의 이탈이 우려되지 않
 아 약속을 이행시키기 않자 낙농가들의 분노속에
 성토하는 소리가 높아지기도 하였다. 남을 때는 철
 저히 손해 가지 않는 방법을 구사하는 유업체가 모
 자르는 시점에서는 과다한 경쟁으로 낙농가에게 달
 콤한 선물공세를 발휘하는등 영리를 위한 근성에
 낙농가만 고달프게 되었다는 불만의 소리가 이어졌

우유가 남을때 유업체의 횡포에 대해 이렇다할
 제재조치가 없던 정부가 우유부족시점에서 유업체
 의 요구를 받아들여 분유를 수입할 계획을 밝히면

서 집유선 이동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여 1.14조치를 발동함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는 볼멘소리가 드높았다. 특히 원유검사제도의 근본적인 개선대책 없는 1.14조치는 낙농가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부당한 처사이므로 이를 즉각 백지화하여 줄것을 요청하였으나 반영되지않고 있다. 결국 전국 12개 낙협명으로 1.14조치의 위헌심판 청구소송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게 되었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3. 분유수입으로 수요충당

한국낙농육우협회의 분유수입반대 건의에 대한 농림수산부의 회신에는 분유수입 배경 즉 우유부족을 지난 여름의 무더위와 우유탄산음료등 신제품개발에 따른 소비급증으로 탈지분유등 유제품의 부족현상이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물론 이를 부정하려는 의도는 없으나 국내 낙농생산기반의 약화 현상이나, 지난해 정부가 젓소도태시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89년말 515천두의 젓소사육두수가 '90년 6월 495천두로 감소하는 등의 생산기반 위축현상에 대해 언급이없어 수급전반의 대책과 관련해 납득키 어려움을 많은 낙농가들이 지적하였다.

정부는 연초에 올해 우유 수요량을 1,953천톤, 총생산량을 1,848천톤으로 예측하고 전년 이월량을 감안할 때 80천톤 수준의 공급부족을 예측하여 분유환산 8천톤이 부족된다는 전망을 밝혔다. 이로써 분유수입이 개시되었고 축협중앙회가 수입 및 판매기관으로서 '91축전기금중 축산물 수급조절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추진되었다. 그러나 분유수입은 8천톤에 그치지 않았고 후반기에 와서 분유 총 2만톤과 버터 2천톤 등 도합 22천톤의 유제품 수입계획이 제시되었으나 이중 분유2천9백톤만 수입되지 않는 채 수입유제품으로 국내 수요를 충당하는 해가 되었다.

특해 국내 생산부족으로 분유수요를 충당치 못하자 국내산 분유가격이 계속 치솟고 있는 시점에서

도 국내산보다 값싸게 수입분유를 구매할 수 있는 한 유업체의 자구적노력 보다는 수입분유에 의존하려는 발상이 근절될수 없다는 낙농가의 지적이 거세게 나타났다. 수입 분유는 전지가 kg당 3,930원, 탈지가 4,380원으로 국내산 시판가와 kg당 무려 2,000원정도 차이가 있고, 따라서 수입분유에 대한 가수요가 생겨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었다. 그 예로 수입버터는 국내산과 비슷한 가격으로 판매되자 재고 때문에 골치를 앓았고 770톤의 잔량을 외상판매 2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하는 방법까지 동원되었다. 마지막으로 수입된 분유 2천백톤에 대해서는 전지 kg당 4,350원에 탈지 4,800원으로 상향조정하여 판매하였으나, 수입분유판매가격의 국내산분유가격과 동일선을 유지해 줄것과 분유 실수요자인 식품업체나 유업체에 대한 수요확인등 수급조절의 실질적기능이 발휘되도록 수입주체가 보관, 배분등의 기능 발휘를 내내요구하는 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수급조절용 분유 외에도 국내에 수입되는 유제품에는 유당, 카제인, 유장 분말등 매년 수입되는 유제품이 2만여톤을 넘어서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 불매운동의 여파로 자제해오던 코코아분유등이 제과업체의 수입시도로 대량 유입되었고, 버터 조정품조차 암암리에 수입되었다. 다행히 코코아 분유의 경우 현재 분유함량에 관계없이 수입자유화되어 있는 것을 분유50%이상 함유시 품목을 재분류토록 추진됨으로써 그나마 코코아분유 수입을 저지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부족해서 정책적으로 수입되는 분유와 버터, 국내생산이 거의 불가능해 수입되는 유제품, 그리고 제도의 약점을 악용해 수입되는 코코아 및 버터 조정품 등 그어느 해보다 수입유제품에 의존해 온 낙농의 한해였다고 생각된다.

4. 원유5% 증산운동

낙농가 스스로 원유 증산운동 캠페인을 전개하며 분유수입의 대체효과를 노린 해는 올해가 처음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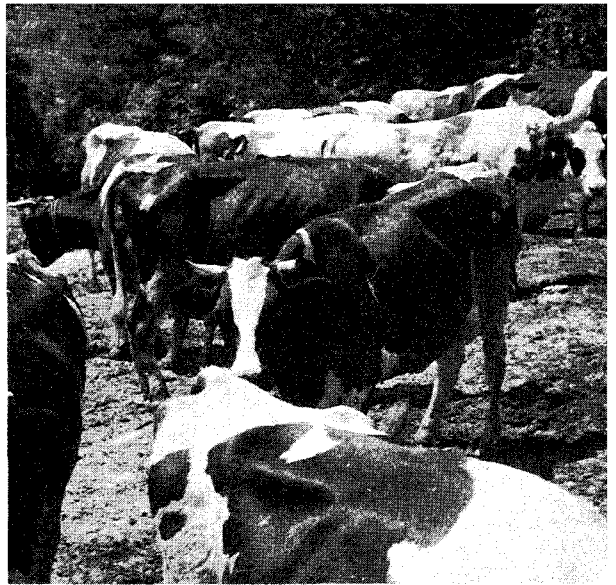
것이다. 지난해 우유가 남아 젖소도태등 원유감산운동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실시하였다면, 부족시 당연히 정부가 앞장서 증산운동을 전개하여 낙농가의 잠재적인 생산여력을 최대한 가동시키고 그런 연후에 분유수입을 시도하는 것이 상식차원의 정책순서라는데서 연유하고 있다.

정부가 당초 분유 8천톤 부족을 제시하여 수입계획을 발표하자 낙농가들은 한결같이 국내 생산을 최대화하되 5% 증산운동을 전개한다면 분유수입량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자구적 의지를 밝혔고, 이로써 원유5% 증산 운동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원유증산이라는 것이 젖소의 생리현상과 사양관리의 획기적 개선이 없는 기대하기 어렵고 단시일내에 성과를 나타낼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낙농가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운동으로 확산시키는데는 큰 몫을 하였으나 구체적인 증산효과를 계측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있었다. 더욱이 젖소 사육두수는 계속 늘지 않고 증체되어 있는데다 수입개방 분위기와 분뇨처리시설강화등 낙농경영환경의 악화로 낙농가의 수는 갈수록 줄어들게 되어 목표한 5% 증산을 사실상 어려웠다고 본다. 그러나 낙농가의 증산운동이 스스로의 대책으로써 전개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면 분유수입은 과연 얼마나 더 늘었을 까를 우려해야 될 사안이라면 큰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해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원유5%증산운동을 위해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선두가 되어 결의대회 개최, 전국 순회기술 강습회 개최, 전문지광고 게재, 캠페인전단 제작배포 등의 활동이 전개되었고 이를 위해 축산진흥기금의 지원이 있었다.

우유가 남을때는 뚜렷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부족시에는 쉽게 분유등의 수입을 통해 수급조정을 피하려는 정부에 대한 일종의 항변적운동일 수도 있고, 낙농가 스스로 문제해결의 담당자라는 점을 자각케하는 운동이었다고 본다.



5. 원유가 5.2% 인상조치

올해의 가장 큰 낙농업 과제는 원유가 인상이라고 본다.

지난 89년 4월 조정된 현행 원유가는 그동안의 각종 물가 인상과 생산비 상승, 그리고 농촌 인력난 등의 경영애로가 제기되었어도 일체반영되지 않은 채 동결되어왔다. 또 수입개방의 분위기가 전 산업을 엄습하면서 장기적 경영은 악화일로에 있자 낙농가들은 원유가 현실화 조치를 강력히 제기하게 되었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UR 대책등 요란했던 구호들이 울들어 사라지는 듯한 분위기였고 NTC 품목 선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 낙농가들이 다소 안도할 수 있는 대책마련에 부심하는 듯하였으나 협상이 어려움에 직면하자 구체적인 언급조차 없어지는 듯 하였다.

원유 생산비는 10%이상 인상되었고, 사료비 절감을 위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 희망도 가졌고 원유검사의 공정을 위한 대책 마련은 요원하다는 느낌이 낙농가의 정신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원유가 현실화 조치만이 낙농가의 원유증산의 실질대책이라는 주장이 지배적이였다. 원유가 인상시기도 매번 그러하였듯이 올해도 낙농가 단체의 잇다른 원유 생산비 조서를 작성 권의하기에 열을 쏟았고, 경제기획원 물가정책국을 수시방문하여 설득하는데 주력하게 되었다. 우유제품의 소비자 가격 한자리 수 이내 인상을 위해 낙농가의 원유대는 5.2% 밖에 인상시킬 수 없다는 결

지난해 5월 입법 예고된 낙농진흥법 개정안
이 정부 부처간 이견때문에 합의조차 되지 않아 국회에
상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실질적인 힘을 가진 정부
부처의 낙농을 보는 시각을 짐작할 수 있고 나아가 농림수산부의 한계
를 드러낸 예라 할 것이다. 낙농산업의 이해관계자 모두가 의견을 일치시키고
주무부서인 농림수산부의 주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기획원의
반대에 부딪혀 불가능한 현실에 대해 낙농가들의
실망이 더욱 깊어질 수 밖에 없다.

론으로 귀착되었고 7월 1일 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당초 정부가 지난 89년의 예를 들어 원유가 인상시 제품가의 대폭적인 인상을 방지키위해 부득이 원유가는 5.2%에 그칠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었으나 실제로 시중 우유 판매가는 급격한 인상을 초래하고 말았다. 원유가 인상 요구시는 소비자 물가를 내세워 억제하면서도 유업체가 시중 소비가 가격 통제에는 힘을 미치지 못한다는 낙농가의 항의 소리가 계속 그치지 않았다.

6. 낙농진흥법의 미개정

정부의 낙농에 대한 의지 여부를 낙농진흥법개정 추이를 보면서 평가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던 만큼 낙농진흥법의 개정문제는 우리 낙농업에 있어 가장 큰 숙원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올해 역시 정기국회까지는 낙농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것이라는 농림수산부의 답변만 나왔을 뿐 실현되지 않았다.

지난해 5월 입법예고된 낙농진흥법 개정안이 정부 부처간 이견때문에 합의조차 되지않아 국회에 상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실질적인 힘을 가진 정부 부처의 낙농을 보는 시각을 짐작할 수 있고 나아가 농림수산부의 한계를 드러낸 예라 할 것이다. 낙농산업의 이해관계자 모두가 의견을 일치시키고 주무부서인 농림수산부의 주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기획원의 반대에 부딪혀 불가능한 현실에 대해 낙농가들의 실망이 더욱 깊어질 수 밖에 없다.

7. 낙농경영의 위기의식 대두

우리 농축산업의 최후보루인 쌀마저 개방이 논의되는 분위기로 치달자 축종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위기의식이 팽배해지게 되었다.

물론 업종별로 강력한 생산자들의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문제는 반영정도에 달려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포기하는 분위기로 흐르고 있는듯한 인상이다. 낙농육우 농가들은 쇠고기의 계속적인 수입과 돼지고기 가격과 비슷한 판매가격으로 시장을 잠식하는 현실에 대해 개탄해 하고 있다. 축산 진흥기금의 재원인 한국마사회 마저 경마를 체육이라는 억지논리를 내세워 체육청소년부로 강제 이관시킨다. 거나 수입개방화에 대비해 경영개선을 통한 국제경쟁력을 강조 하면서도 사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외면하고 있는데 대해 낙농가들의 실망은 극도에 달해있다. 생산비의 직접적인 절감대책과 관련 현행 사료제도의 개선을 통해 옥수수등 수입사료곡물을 농가에서 직접 구입해와 사양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해 두고 있는 낙농가들로서는 더 늦기전에 낙농의 활로가 모색되기를 기원하고 있다.

축종간의 차이는 있지만 수입개방에 대한 위기의식이 팽배해지면서 각 단체와의 연대의식이 우려나고 공동대응책 모색이 두드러졌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고 본다.

닥아오는 새해 92년에는 낙농육우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앞에서 열거한 모든 문제들이 속시원히 해결되기를 기대해보며 아쉬운 한해를 보낸다.